

보이콧 日 ‘가지 않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일본 공무출장·현장체험학습 자제” 권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청 차원에서의 동참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공무 출장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무리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다면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 김 교육감은 “일본으로의 현장 체험학습도 최대한 억제해줄 것”을 권고하며 “이는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까지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로에서 보행자 최우선의 원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도로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게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자동차 눈치를 본다. 보행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주저해야 하느냐”면서 낮은 인권감수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보행자 중에서도 아이들과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교육기관 안에서라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운전 습관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공공시설 내진보강 확대·안전관리 강화

지난 21일 오전 11시 4분 경북 상주시에 규모 3.9 지진 발생에 이어 22일 오전 1시 15분에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50km 해역에서도 규모 2.0 지진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전국에 51회 지진이 발생했고, 전라북도에는 최근 2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시·군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지진에 대비해 시·군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전라관 등을 활용해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주요 시설물(청사, 교량 등)과 옥외 대피소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진 발생 동향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도내에 지진 옥외대피소

1003개(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원 등)를 지정하고 모든 옥외대피소에 표지판을 설치해 빈틈없이 옥외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 1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을 48.5%로 향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소방본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운)가 올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위한 도내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및 야영장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2016~18년) 전북에서 휴가철(7~8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905건, 인명 피해는 총 28명(사망 7명 등)으로, 주 원인으로는 부주의

332건, 전기 266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지난 7월 5일 300여명이 대피한 서울 양천구 상가 화재가 에어컨 실외기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더운 날씨 냉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전기 화재 안전관리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피난방법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휴가철 화재안전 홍보 강화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관계자 자율유증순찰이며, 특히 전국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중 관광 관련시설을 휴가철 기간 중 우선 점검하여 안전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대일 여론전 조국에 靑 “충분히 발언 가능…SNS 규제 불가”

청와대는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SNS 개인 공간에 대해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을 링크하며 대일 메시지를 처음 낸 데 이어 현재까지 40여개의 일본 수출 규

제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나아가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있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 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

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또 2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내놓은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자심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라” 전북 교육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활성화 ‘총력’

전북도, 특교세 3억6천만원 확보... 행안부장관 현장 방문점검 취약계층 편의 개선·접근성 높은 금융기관 쉼터 지정 적극 확대

전북도가 폭염기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도는 올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편의를 개선한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시범 운영하고,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수요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국 35억원 중 3억6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폭염기간 무더위쉼터에 더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 이 같은 노력에 힘을 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22일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인 전주 금안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무더위쉼터 이용자 및 관계자 등과 환담

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주시 금안노인복지회관은 폭염기간 맞춤형 무더위쉼터로 운영되어 야간에도 전담 관리책임자가 배치되며, 건강체조, 영화상영 등 건강·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용 텐트, 침구류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65세이상 노인은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량수송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동행한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금년 최초 시범 운영하는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적극 추진하여 많은 도민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가지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무더위쉼터로 적극 확대하여 폭염기간 많은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닥쳐올 재난 대비에 만전... 폭염도 국가 차원 관리”

文대통령, 여름철 안전 대책 철저 구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멸된 태풍 다나스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 1관 3층 대회의실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태풍 다나스가 일찍 소멸돼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또 폭염과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

업과 축산업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안전,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 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폐막까지 일주일 남겨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시면 대회 흥행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